

시선

사설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과거로의 회귀인가

정부가 지난 12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10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 전환과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전환 이후 약 6년 만의 회귀다.

민간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검·인정도서와는 달리 국정도서는 정부가 선택한 단 하나의 관점만이 교육에 반영되기에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가치관이 교육에 투영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동일한 사안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사의 경우에는 그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교과서, 특히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세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유엔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은 지난 2013년 8월 9일에 열린 제69차 총회에서 문화적권리분야의 특별 조서관 파리다 샤히드(Farida Shaheed)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되어 있을 위험이 있’으며 ‘단일한 역사 교과서만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의 내러티브가 다른 시각들을 독점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은 ‘교과서 내 (기술)공간이 가장 제한되는 초·중등과정의 경우 교과서 저자들은 단 몇 문장으로 내용을 서술해야 하므로, 이런 제한점이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층에게 이념적 메시지를 고취시키는 효과적인-그래서 위험한-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 주도 하의 왜곡과 조작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을 구조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 대한민국의 교육사에서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은 유신체제가 개막된 1974년부터였다. 정부수립 이래로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채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유신 이후의 박정희 정부는 소위 ‘국적 있는 교육’을 주장하며 정권의 정통성과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전사(前史)로 말미암아 많은 대중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조치를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오독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움직임은 유엔이 상기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듯 본질적으로 ‘정부의 메시지를 최대한 광범위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행동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수 대 진보’가 아닌 ‘전체주의 대 민주주의’의 프레임이자 ‘획일성 대 다양성’의 대립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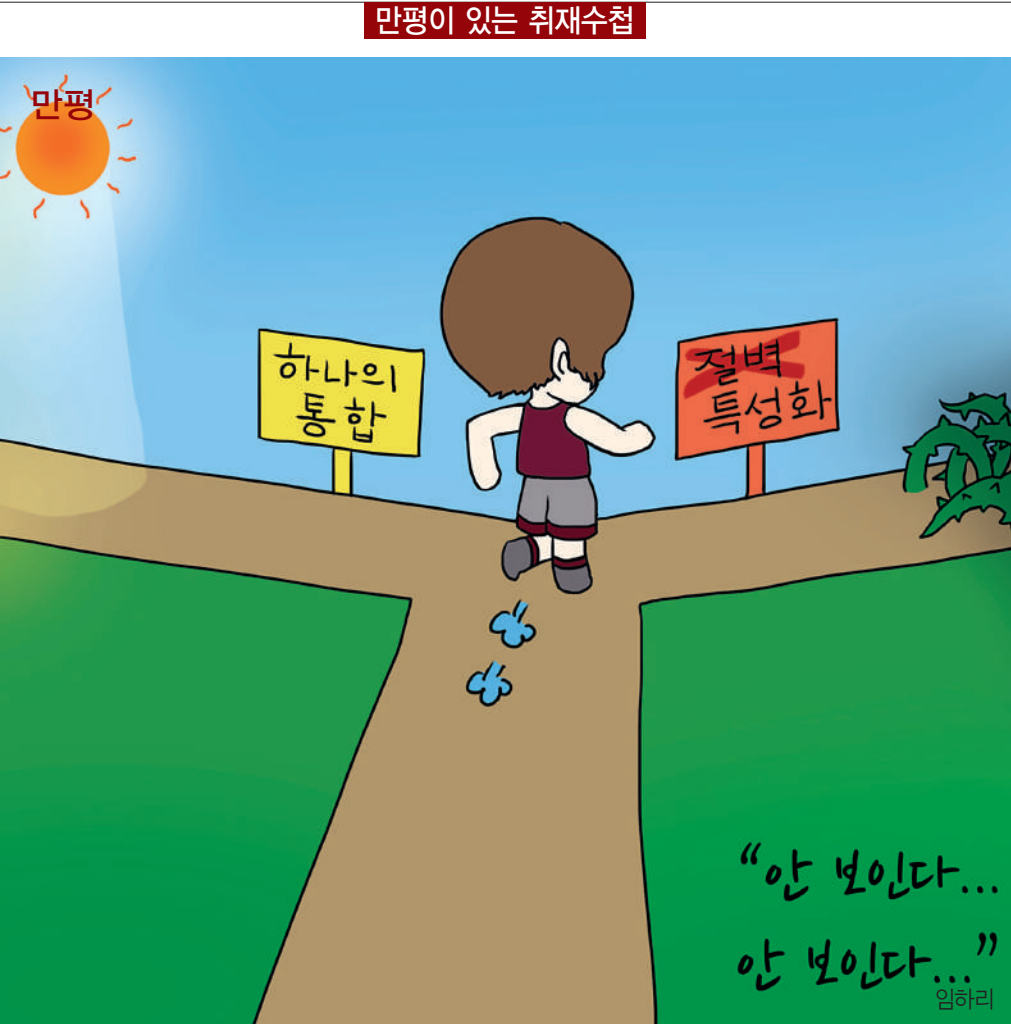
국가가 교과교육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게 되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지난 2011년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전환은 한국사회의 누적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서 촉발된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이 일은, 정말로 올바른 일이라고 볼릴 수 있는가?

자회사 통한 고용으로  
청소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0. 1 ~ 10.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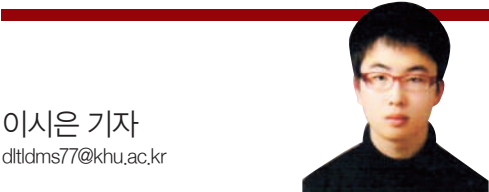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11일 현재 진행 중인 SPACE21공사 관련 장애학생 이동문제에 대한 간담회가 장애학생 지원센터 주최로 개최됐다.(“**장애학생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다**”/온라인 대학주보, 2015.10.5)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 SPACE21 건설사업단, 관리팀 그리고 학생지원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진진주 직원은 “숲길의 경사로는 경사 기준치를 크게 웃돌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도서관 옆길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 길도 경사가 상당히 높고 동선이 복잡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의 주제 - 유사학과 다전공 금지 조항

‘어정쩡한’ 통합, 피해는 결국 학생



오랜 기간 준비한 디지털 기획 - ‘하나의 경희’는 일부 ‘유사학과’의 다전공 금지 문제로 시작한다. 이번 취재의 ‘백미’를 꼽으라면 기자는 주저없이 외국어대학 이한규 학장은 “외국어대학은 순수학문이다”라는 말을 택하겠다. 이 말은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캠퍼스 및 학과 분류를 마친 학교가 얼마나 큰 문제점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결론 ‘결렬된 것처럼’ 보이는 유사학과와 계열별 정리 문제는 본·분교 통합 당시에 미뤄던 ‘결정적 선택’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남아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외국어대학이다. ‘학과와 강의 존속’을 위해 언제 생긴 지도 모르는 ‘강제화된 다전공 금지규정’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진실된 교육을 외면한 방식이다. ‘규정이 없다면 학생들이 국제캠을 이탈해 서울캠에 영어를 배우러 갈 것이 우려된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의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학교가 이런 우려를 표한다는 것은 유사학과와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특성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계열별 정리 역시 마찬가지다. 취업난에 어문계열 학생들은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다전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외국어대학 재학 인원 약 1,600명 중 한 해 300명 정도가 서울캠으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학문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어문계열 학생들을 이공계열 학과가 다수인 국제캠캠퍼스에 배치한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300’이란 수치가 말해준다. 캠퍼스 간 계열 정리가 확실했다면 유사학과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본·분교 통합 당시 유사·중복학과들에 대한 학교의 선택은 ‘통합’이 아닌 ‘학과 특성화’였다. 이는 지금까지 갖가지 문제점, 특히 유사 개설강좌의 강의 수요 측면에서 꾸준히 드러나고 있다. 교육적·학문적 요인을 고려해 해당 학과들을 선택해서 ‘특성화’한 것이 아니라 ‘중복학과’였기에 급히 지향점을 개편한 것이므로 사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구성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업을 밀어붙이지 못했다면 거기서 그만 두던가, 움직이기로 했으면 과감한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 미래를 명확히 내다보지 못한 채 이어진 지지부진한 논의는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다행인 점이 있다면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캠 몇몇 교직원들의 말처럼 양 캠퍼스가 ‘입학성적’과 ‘대외적 인식’ 등, 계열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꾸준히 맞춰왔기 때문이다. 시기 역시 학사구조·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교육부 ‘프라이м 사업’과 맞물려 매우 적절하다.

더 이상 끌어가는 상처를 아플거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살 전체가 썩을 뿐이다. 이제 도려내는 결단은 학교의 몫이다.

결국 정말 중요한 것은  
‘디테일(detail)’에 숨어있다

세시봉

백승철 <편집장>



요즘 미디어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말로 풀어쓰면 ‘눈에 보이는 큰 문제보다 눈에 잘 띄지 않은 작은 부분이 문제를 일으킨다’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s)’라는 구절에서 변형된 것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기존과 차별화되는 어떤 변화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이 특히 더 중요하다. 구체성이 없는 ‘합의’나 ‘협약’은 서로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단순히 그것을 인지하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해오던 대로 행동하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 원래 행동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변화의 방향이 ‘좋은 방향’이라면, 그동안 취해왔던 ‘달콤함’을 버리고 더 많은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관성’을 거스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면 강제력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지난 6월 우리학교 교수의회와 일반대학원 총학회는 ‘대학원 공동체의 인권보장과 연구문화 개선을 위한 교수-학생 공동선언식’을 가졌다. 교수와 대학원생의 철저한 감을관계에서 기인하는 대학원생 인권침해문제는 사실 비단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우리학교에만 국한되는 일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교수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로 노력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바로 ‘디테일’이다. 이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부당한 일을 당할 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연구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시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합의문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역부족이다. 단순히 ‘좋은 말’을 나열해 놓는 합의문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조항이 있어야 ‘합의문’도 의미가 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지난 2011년 미래협약과 올해 노조에서 발표한 ‘존중합의문’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 협약과 합의문은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상 ‘사장’됐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결여된 반쪽짜리 ‘협약’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도 사라졌고, 현재까지 바뀐 것은 당연히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닌 본질 속에 있는 ‘디테일’이다. ‘디테일’이 없다면 그 속에 숨어있던 ‘악마’는 다시 활개칠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식’이 지난 미래협약과 존중합의문처럼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정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경정 02-441-7317(미래7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